

국회 이번주 ‘슈퍼워크’… 여야 전면전 예고

민주·국힘 ‘강대강’ 대치 전망
이진숙 등 인사청문회 잇따라
야, 방송4법·25만원지원법 처리
여,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인데다,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내내 예고돼 있어 여야 간 ‘강 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가운데 여야가 맞붙을 ‘화약고’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이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하는데 야당 주도로 이들 일정의 청문회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현안과 2인 체제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사퇴시키겠다 버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도 대립했다.

청문회 이틀간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인사도 참고인 명단에 무더기로 올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문화예술계 인사를 ‘좌파’ 또는 ‘우파’로 분류하며 이분화

했다며 당사자들을 불러 이를 따져 묻자는 입장이다.

다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옹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도 시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빼대려한 ‘방송4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

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지속가능 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1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



사, 점검·평가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진숙,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를·사진)은 21일 광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문수 “교원소청 청구 증가… 부당 처분 살펴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며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지난 2022년 659건, 2023년 666건으로 증가세이고, 올해는 지난 5월31일 기준 290건이다.

청구건수 증가는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나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늘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인용률이 증가하고 청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권익 침해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는 촘촘한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위원 더민주혁신 대표, 오늘 ‘비전선포식’

권리당원 100명 선대위원장 추대

강위원(사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권리당원 100인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하는 2024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 대표는 선대위를 ‘혁신돌풍’으로 명명하고 지난 18일부터 노인·여성·장애인·소상공인 등 전 부문 당원 1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광주시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11만 권리당원과 140만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이라며 “국회의원 중심 봉건



영주의 시대’를 끝내고, 주권자인 당원과 시민을 존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진정한 ‘당원중심 대중정당 시대’, ‘민주·공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립5·18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지난 19일 광주대 인성관 1층으로 이전한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방문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서구을)과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된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내달 4일 치러진다.

정성현 기자

野 “김 여사 비공개 조사, 검찰과 약속 대련”

與 “법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약속 대련”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받지 않더니 법사

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블랙펄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 까”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떨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걸 다 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당 대표 당선인, 김선민(왼쪽에서 세번째), 황명필(네번째) 최고위원 당선인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조국, 당 대표 연임 확정… 민주당과 본격 경쟁

10월 재보선 준비… “인재 영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일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 대표 연임을 확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찬성률 99.9%를 기록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김선민 의원,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등 2명이 뽑혔다

조국혁신당은 2기 지도부 선출을 ‘자강’(自強)의 계기로 삼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시도당 구성과 당원 확대 작업 등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10월 재보

궐선거에서 존재감을 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4·10 총선 비례 투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면 2026년 지방선거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조 대표는 “인재 영입과 관련해 영남·호남에서 차세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새 노무현(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며 “지역에 착근한 새로운 분들, 청년과 여성 등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가 ‘조국 원톱 체제’인 것은 약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

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궐위 시대행을) 할 것”이라며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12%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부족하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일 지명하고 또 연말까지 시도당을 창당하고 조직을 전국화하면 내년 초 정도까지는 15%를 돌파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